

한반도 평화와 이라크 파병 연장은 양립할 수 없다

이제는 자이툰 철군이다

자이툰 파병 연장 반대와
이라크 점령 종식을 위한
10·27 한미공동반전행동

일시: 10월 27일(토) 오후 4시 / 장소: 서울역(광화문까지 행진) / 주최: 파병반대국민행동



2차 남북 정상회담 평가와
진보진영

6~7면

이라크 점령 5년과
자이툰 철군

3면

가성 정치

-범여권의 파산과 불안한 이명박
-문국현이 진보 후보인가

5면



베네수엘라의 개헌과 차베스

8~9면



버마 민중항쟁의 앞날

4면

고려대 출교
무효 판결의 의의

12면

서평

-《성적 다양성
두렵거나 혹은 모르거나》

9면

〈맞불〉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
counterfire.or.kr](http://www.counterfire.or.kr)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 구역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를 모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

— 이명박의 전국토의 경제자유구역화 구상

“대선은 할 것 없어. 올해 12월 대선은 무조건 이명박이 하는 거니까, 장로님이니까.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안 찍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 우파 목사 전광훈
(청교도영성훈련원 원장)

“대통령으로서 ‘인민’ 소리를 여러 번 하는 등 낯 뜨거운 언행을 여러 번 했다.”

— 인민을 인민이라 부르지 말라는 극우의 김용갑

“그나마 대선 국면이니 신당이 잘해 주길 바라지만 ‘지금이라도 잘해 봐라’ 싶다가도 하도 못하니 ‘에이, 망해버려라’하는 생각이 든다.”

— 노무현을 지지했던 정해구 정치학 교수

“한미FTA만 성사되면 경제가 술술 풀릴 것처럼 세뇌시키는 것 같아 거부감이 들었다.”

— 한 조사에서 ‘보기 싫은 광고’로 뽑힌 한미FTA 홍보 광고에 대한 시청자 소감

“엄마가 흰머리가 늘었는데, 더이상 흰머리가 늘지 않고, 투쟁을 승리로 끝내고 엄마와 여행을 함께 가고 싶다.”

— 이랜드노조 야탑분회
강해정 분회장의 아들 박상우 씨

“상암월드컵점에 들어가셨을 때, 전경인 친구의 전화가 왔습니다. ‘진압 준비한다고 어머니 조심하시라’는 연락에 가슴을 졸였습니다. …가녀린 여인이 엄마라는 이름으로 한 손에 피켓을 들고, 차가운 바닥에 앉아 오열하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 이랜드노조 면목 분회원의 딸 배수연 씨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노무현 정부만의 특별한 방법

알수록 기가 막힌 비정규직 ‘보호’ 사기극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악법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우기면서 내세운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2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한다’는 것이었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은 뉴코아·이랜드 투쟁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랜드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비정규직 1천여 명을 2년이 되기 전에 대량 해고했다.

또 하나는 ‘차별시정제도로 비정규직 차별이 없어진다’는 것이었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차별시정신청’을 한 고령축산물공판장 노동자 1명이 최근 해고됐다.

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 판정을 미루는 사이에 공판장 사측은 협박·회유를 통해 차별시정을 신청한 19명 중 8명이 신청을 취하하게 했고, 나머지는 차례로 해고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차별시정 신청의 주체를 노조가 아닌 개인으로 할 때부터 예상된 일이었다.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까지 5년이 걸릴 차별시정신청 소송 진행중에 이미 그 노동자는 해고될 것’이라는 노동계의 경고가 울렸던 것이다.

더구나 기업주들은 차별시정 신청조차 못하도록 분리직군화·무기계약직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무기계약직화는 진작

밝혀졌듯이 정규직화이긴커녕 영구적인 비정규직화이다. 최근 〈매일노동뉴스〉가 폭로한 중소기업청 인사관리 규정에는 근무 성적 평가를 통해 매년 10퍼센트의 무기계약직을 해고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심지어 학교비정규직 인사관리규정에는 “불순한 목적으로 집회, 시위, 구호 제창 등 직원을 선동하고 소요를 획책하면 해고한다”는 내용까지 있다. 노동기본권마저 가로막는 것이다.

뉴코아·이랜드 투쟁이 보여준 것처럼 단결과 투쟁을 통한 차별시정과 정규직화만이 진정한 대안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지고 있다.

전지윤

압수

경찰은 집회 사진을 채증해 뉴코아·이랜드 연대 집회에 참가했던 활동가들에게도 소환장을 보내고 있다.

경찰의 노림수는 활동가들을 위축시켜 뉴코아·이랜드 투쟁에 대한 정의롭고 정당한 연대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경찰 탄압에 대해 “뉴코아·이랜드 투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소환이나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별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리고 “적어도 대선까지는 출두할 수 없으니 당원들에게 출두를 종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경찰청에 보냈고, 10일에는 경찰청 앞에서 소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의 이런 방침은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저들의 탄압에 대한 정면 대응으로 매우 올바르게 다. 다른 단체들도 이런 방침을 정해서 다 같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

조승희

우리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먹이려고 안달인 정부

지난 4일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또 발견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 34조와 시행규칙 35조는 등뼈가 광우병특정위험물질임을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등뼈는 국제수역사무국이 규정한 광우병위험물질이 아니”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국민건강을 위한수의사연대 홍하일 위원장이 지적하듯, “한미FTA추진을 위

해 ‘검역 중단’이라는 법률 상에 있지도 않은 조치”만 취한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등뼈가 발견된 날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 수입까지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견된 등뼈에 관한 미국 측 해명 자료와 한국 측 평가문서 공개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민변은 지난 5일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한미FTA저지범국본과 광우병

국민감시단도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과 한미FTA 폐기를 촉구했다.

노무현 정부는 10월 9일 범국본 박석은 집행위원장과 주제준 상황실장을 연행하는 등 한미FTA 반대운동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한미FTA 비준을 위해 기꺼이 국민 건강을 포기하려는 노무현 정부에 맞서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날’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박건희

빈곤 노인들을 우롱하는 기초 노령 연금

국민연금을 대폭 깎는 대신 전체 노인의 70퍼센트에게 고작 8만 5천 원짜리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가 그 약속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려 하고 있다.

9월 14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보면 우선 월소득이 40만 원을 넘으면 한 톨도 받지 못한

다. 부부의 경우 둘이 합쳐 64만 원을 넘으면 역시 한 톨도 받지 못한다.

다만 이것은 ‘집도 절도 없을’ 경우 예외다. 3백만 원 이상의 예금이 있으면 연 5퍼센트 이자율을 적용해 소득에 포함시키고 전세나 월세 보증금에도 연 5퍼센트 이자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한다. 공

적 연금과 각종 민간 연금도 모두 소득으로 계산하고 농지, 농업직불금, 자동차도 소득으로 환산한다.

부부가 기초연금을 같이 받으면 각각 20퍼센트를 깎는다. 가난한 노인들에게 어떻게든 기초연금을 안 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알아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 찾아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이라면 실제 수급자 수가 대폭 줄 것은 뻔하다. 그것도 10월 15일부터 한 달 안에 신청해야 한다.

노무현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기업과 부자 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면서 이처럼 은퇴한 노동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은 악착같이 깎으려는 끔찍한 나라다.

장호중

학살의 5년 저항의 5년

자이툰이 미군을 도와 이라크를 점령한 지난 4년 간 이라크인들의 고통은
날마다 배가됐다. 여론조사기관 ORB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이라크인 사망자 수는 1백20만 명에 이르렀다.
이제는 자이툰을 철군시켜야 한다.
왜 그런지 김용욱 기자가 살펴본다.

2003년 이라크를 침략할 때
부시 정부와 네오콘(신
보수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라크를 지배하면 중동을 지배하는
미국의 지위가 확고해질 것이고 유럽연
합·일본·중국 등 잠재적 경쟁자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라크인들은 미
군을 해방자로 환영할 것이며 자유시장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면 이라크는 순식
간에 재건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정은 완전한 몽상이었다.

점령 아래 고통스런 삶

재건을 자유시장에 맡긴 결과 엄청난
부패의 사슬이 형성됐다. 예컨대, 로라
부시는 친구의 회사가 한 마을에 약 5백
억 원짜리 성형외과 건물을 짓는 계약을
따내도록 도왔다. 그러나 이 마을은 수돗
물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곳이다!

재건 사업의 철저한 실패와 점령군의
무능 때문에 이라크인들의 생활은 사담
후세인 정부 시절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
다. 바그다드에는 전기가 하루에 4~6시
간밖에 안 들어온다.

폭격으로 파괴된 수많은 병원들이 재
건되지 않았고, 수도 파이프의 60퍼센트
가 부실 공사 때문에 새고 있다.

2006년 말 이라크 노동사회부에서 발
표한 통계를 보면 실업률이 50~70퍼센
트에 달한다. 이라크 인구 2천9백만 명
중 거의 5백60만 명이 침략 이후 빈곤층
으로 전락했다.

이라크인들이 저항에 나선 것은 당연
했고 점령군은 2003년 여름부터 본격화
된 이라크인들의 저항을 투옥과 학살로
막으려 했다.

감옥 중에는 아부 그라이브가 가장 악
명이 높았다. 간수들은 잠 안 재우기·벌
거벗겨두기·나체로 피라미드 쌓기 등
만행을 저질렀고, 일부 여성 수감자들은
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전 소장 재핀
스키는 당시 국방장관 린스펠드가 직접
고문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미군이 저항의 중심인 이라크 중부에
서 이런 범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했다. 2004년에 한국
군 자이툰 부대 3천여 명이 북부 쿠르드
지역에 파병됨으로써 미군이 중부에서
학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망보는'
구실을 한 것이다.

언론에 폭로된 미군 학살 사건은 끔찍
했다. 2005년 11월에는 미군 해병대원들
이 하디타에서 여성과 어린이 등 마을 주
민 24명을 학살한 이라크판 '미라이 학살
사건'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학살이 발생했을 것이다. 실
제로 의학 잡지 《랜싯》은 지난해 말 점
령 때문에 사망한 이라크인이 65만 명이
라고 발표했고, 얼마 전 여론조사기관인
ORB는 1백20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점령에 맞선 저항

이라크인들의 저항은 2003년 5월초
부시가 승리를 선언한 그 순간 시작했다.
이라크인들이 부시 정부에 결정적 타격
을 입힌 것은 2004년 4월 팔루자와 나자
프에서 동시에 벌인 대규모 반점령 항쟁
이었다. 이 항쟁은 수니파와 시아파가 단
결해 점령군에 맞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
여 줬다.

브루킹스연구소가 2007년 10월 1일
에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03년 6월에
는 하루 평균 6회였던 저항세력의 공격이
2007년 4월에는 1백70회로 늘었다. 그
중 미군에 대한 공격이 압도 다수이며 이
라크 꼭두각시 정부의 군대를 상대로 한
공격까지 더하면 전체의 80퍼센가 넘는
다.

한편, 이 통계를 보면 민간인 대상 공격
횟수가 2006년 초 이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점령군의 분열지배 전략
때문에 벌어진 결과다. 미국은 2004년
팔루자와 나자프에서 수니파·시아파 동
시 항쟁에 직면하자 분열지배 전략을 사
용했다. 점령군은 시아파 지도자들과 정

치적 동맹을 맺고 부정선거를 통해 시아
파 지도자들이 정부를 장악하도록 지원
했다. 점령군은 종파로 나뉜 살인 특공대
를 물질적으로 지원했다.

이런 종파 간 분열지배 정책은 2006년
2월 사마라의 시아파 황금돔 사원 폭파
사건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 뒤 수니파
에 대한 보복 공격이 확산되면서 종파 간
살상의 악순환이 견잡을 수 없이 격화했
다. 이것은 한편으로 부시 정부에게 골칫
거리가 됐지만, 부시 정부는 종파 간 충돌
을 빌미로 점령 연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분열을 조장하는 점령군이 오래 머물
면 머물수록 이라크에는 더 많은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라크에는 제국주의에 맞
선 종파 간 단결의 역사가 있다. 예컨대
이라크 공산당은 쿠르드족, 수니파와 시
아파 무슬림, 기독교도, 유대인 신도들을

당원으로 받아들였다. 점령군들이 빨리
떠나면 떠날수록 비(非)종파적 운동들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계속되는 반전 운동

제국주의 정부는 국내의 정치적 반발
이 없다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식민지
민중을 대량 학살하고 수많은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 그러나 국제 반전
운동은 그것을 두고 보지 않았다.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은 초기부터 참
가 규모가 매우 컸다. 한 프랑스 학자는
2003년 1~3월까지 3천5백만 명이 반전
시위에 참가했다고 계산했다. 아쉽게도
바그다드가 함락되고 난 뒤 반전 운동 대
열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반전 운동의 주장이 옳았음이
입증됐다. 대량살상무기는 없었다는 사
실이 드러났고 이라크인들은 점령군을
환영하지 않았다.

구체적 성과도 남겼다. 스페인에서는
친전쟁 우파 정부를 날려버렸고, 영국에
서는 토니 블레어를 물러나게 만들었다.
이라크 점령 반대 정서는 세계적으로 여
전히 강력하다. BBC 방송이 전 세계 22
개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미군
이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답한 사
람이 전체의 67퍼센트였다. 한국에서도
2003년부터 이라크 점령·한국군 파병
반대 행동이 지속돼 왔다. 지난해 말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거의 90퍼센
트가 이라크 파병에 반대했다.

미국에서도 미국인의 71퍼센트가 이라
크 전쟁을 잘못된 전쟁으로 여기고 54퍼
센트가 신속한 철수를 바란다.

2007년 10월 8일 런던 반전 시위

10·27 반전행동에 동참하자!

10월 27일에는 미국 내 11개 대도시
와 한국에서 '자이툰 파병 연장 반대와
이라크 점령 종식을 위한 한미공동반
전행동'이 열릴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자이툰 파병 연장을 착
착 진행중이다. 정부는 임무종결 계획서
제출을 미루고 1백퍼센트 정부 인사로만
구성된 '자이툰부대 성과평가단'을 파견

한 상태다. 게다가 10월 11일 '제2차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에서는 아예 "아프가니
스탄에 주둔 중인 동의·다산 부대 철수
후 한국의 대(對)이라크 기여 방안"을 논
의할 예정이다.

부시 정부는 지금 이란 공격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라크
에 남아 미군을 계속 뚫겠다는 것은, 그

동안 미군의 학살 도우미 노릇을 한 것
도 성에 차지 않아 확전 준비를 거듭했
다는 뜻이다.

정부가 10월 15일 내놓을 임무종결 계
획서는 임무 '종결'이 아니라 임무를 '연
장'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연말 파병
연장안 통과를 막기 위해 10·27 공동
행동을 성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무현이 끝내 파병을 연장한다면 남
북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평화 대통령'
이미지를 간직한 채 임기를 마칠 수 없을
것이다.

흔들리는 버마 군사정권

강동훈

버마 군사정권이 폭압적 탄압으로 민중항쟁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최소 2백여 명이 희생되고 1만여 명이 연행됐는데, 연행자 중 6천여 명이 승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대에게 박수를 쳤거나 승려들에게 응원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들을 마구 잡기로 연행하고, 헬리콥터와 트럭을 타고 다니며 화성기를 통해 “너희들의 사진을 갖고 있다. 모두 체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시위는 줄어든 듯하지만, 버마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은 꺾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군사정권의 시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국영방송의 뉴스에 항의해, 뉴스가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집에 있는 TV나 라디오를 끄고 있다.

연행된 버마 승려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한국에서 활동중인 버마인 활동가 소모뚜 씨는 “현재 시위는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국민들은 당장 할 수 있는 저항을 하며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언제든 큰 시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식농성

국제적인 항의 운동도 벌어져 버마 군사정권을 규탄했다. 영국 런던에서는 1만여 명이 참가한 시위가 벌어졌고 세계 35개국에서 버마 군사정권을 규탄하는 국제공동행동이 10월 6~7일에 진행됐다.

10월 7일 평등에서도 버마인과 한국인 1백50여 명이 모여 ‘버마 민중 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국제공동행동’ 집회를 하고 종로 조계사까지 행진했다.

계속된 버마 민중의 영웅적 저항과 국제적 연대 운동으로 버마 군사정권은 이미 큰 타격을 받았다.

군대 내에서 균열도 나타나고 있다. 시위 진압에 동원됐다가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타이로 망명한 히타이 윈 소령은 “많은 군인이 승려에게 발포를 했다는 사실에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

하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버마 군사정권은 탄압뿐 아니라 유화 제스처도 취하고 있다.

아웅산 수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막아 온 독재자 탄 쉘가 유엔 특사를 만나 아웅산 수치와 대화할 수 있다고 밝

10월 6일 런던에서 버마 군사정권에 항의해 1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운동 속의 혼란 -

버마 민중항쟁을 분명히 지지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당원게시판에 ‘미안마 문제, 권 후보와 당은 신중치 못하다’라는 글을 올린 오한강 동지(이하 존칭 생략)는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를 방문하고 버마 민중항쟁을 지지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비판했다.

“인권의 문제로서 [버마]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친서방적인 아웅산 수치”가 지도자인 버마 민중항쟁을 지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오한강은 일관되게 버마 민중이 거부하는 ‘미안마’라는 국호를 쓰고 있다.)

이런 주장에는 버마 군사정권이 “친 사회주의”적이라는 착각이 깔려있는 듯하다.

그러나 버마 군사정권은 말로는 ‘사회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권위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지배자들일 뿐이다. 더구나 1988

년 쿠데타 이후 ‘버마식 사회주의’라는 ‘미사여구’마저 없어버렸다.

오한강은 친서방 지도자를 뒀다는 이유



10월 9일 중국대사관 앞 집회 - 버마 군사정권을 지지하는 중국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혔다.

물론 수치가 군정에 맞선 반대 활동을 중단하고, 경제제재 등 제재안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말이다.

버마 민족민주동맹(NLD)의 니안 원대변인은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만으로도 수치와의 면담에 진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수치가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말해 왔기 때문에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 수치는 8888항쟁 때도 “군대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며 군사정권의 숨통을 틔워준 바 있다.

그러나 수치가 군부와 타협하는 것을 지켜보며 민중항쟁을 건설·확대하는 일을 멈춘다면, 군사정권은 지난 1990년 총선 결과를 무시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운동을 파괴하고 그 성과를 무력화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웅산 수치의 행보에 상관없이 버마 군사정권을 완전히 몰아낼 때까지 투쟁해야만 버마에서 완전한 민주화가 가능할 것이다.

로 버마 민중항쟁에 대한 지지를 꺼린다. 그러나 1987년 6월항쟁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친서방적인 김대중이나 김영삼을 지지했다고 해서 그 항쟁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오한강은 “친중국적인 미안마 정부를 전복하려는 미국”의 위선을 옳게 비판하지만, 서방 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패권 때문에 버마 군사정권을 지지하는 중국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또, 오한강은 ‘내정 불간섭’을 강조한다. 물론 진보진영은 제국주의적 ‘내정 간섭’을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아래로부터 국제적 민중 연대는 ‘내정 간섭’이 아니다. 그런데 오한강은 제국주의적 개입과 진보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모두 ‘내정 간섭’으로 뒤섞고 나서, 중국 제국주의의 ‘내정 간섭’에는 침묵하고 국제적 민중 연대만 반대하고 있다.

결국, 버마 군사정권에 반대해 민중항쟁을 지지하는 태도는 비판받을 입장이 전혀 아니다.

11월 11일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 평화를 위한 ‘2007 범국민행동의날’이 개최된다



지난 10월 1일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이 모여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날’을 개최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범국민행동의날은 한국 사회의 핵심 쟁점들인 한미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반전평화를 주요하게 요구하는 대회가 될 것이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이 계획하고 있는 10월 27일 ‘자이툰 파병 연장 반대와 이라크 점령 종식을 위한 한미공동반전행동’도 범국민행동의날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중요

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 조직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인 범국민행동의날은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쟁점을 제기하고 시위를 벌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 범국민행동의날은 대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벌어진다. 이 대회의 주요 요구들이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되도록 많은 단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그 점에서 이 대회를 먼저 기획한 한국진

보연대가 초기에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소홀했던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 행사가 한국진보연대만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집회의 규모나 정치적 성과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진보를 바라는 모든 단체와 개인들이 범국민행동의날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이정구

좌초하는 ‘분열신당’과 살얼음을 걷는 이명박

승주

지난 8월 <한겨레> 성한용 기자는 “남북 정상회담이 4자 정상회담으로, 북미 평화협정으로 발전해도 범여권 … 후보들의 ‘전투력’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 유권자들은 범여권 후보들을 ‘대안’으로 생각지 않고 있다”고 썼다.

실제로 ‘분열신당’ 후보들의 죽기살기식 폭로전은 “‘정상회담 특수’마저 차버린 경선 파동”이라는 비웃음을 사고 있다. 이들이 벌이는 아귀다툼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능가한다.

마구잡이로 등록된 선거인단부터 한나라당 선거인단의 복사판이었는데, 노무현은 물론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시·군 의원, 구속자, 행불자, 죽은 사람까지 명의 도용으로 선거인단에 포함돼 있었다.

3백만 명을 호언한 모바일 선거인단은 간신히 20만 명을 채울 듯한데 이조차도 폰페기, 폴페기 등 피 튀기는 동원 경쟁 덕분이다.

경찰의 정동영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를 계기로 판이 더 커져버린 개싸움은 경선 유지는 물론 ‘신당’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런 추잡한 경쟁에서 간신히 승자를 가려서 민주당의 ‘개싸움’ 승자와

“하나로 합치든, 제각기 갈 길을 가든 누가 관심을 갖겠는가.”(<경향신문>)

한편 대안 부재 때문에 역겨움을 껌 잡고 이명박을 찍으려던 사람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명박은 ‘마사지 걸’ 운운하는 저질 발언과 부시 ‘알현’ 계획 불발 이후 지지

율이 8퍼센트나 뚝 떨어져 한나라당 경선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BBK 김경준은 귀국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통합신당은 ‘이명박 국감’의 칼을 갈고 있다. 선대위 고문직을 수락한 박근혜도 이명박 거품이 꺼지는 걸 확인하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일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명박 지지자 3명 중 1명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의 불안한 처지와 범여권의 지리멸렬을 개혁 염원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호기로 만들어야 한다.

정동영 홀로 참석한 10월 8일 대구·경북 합동 연설회 – ‘혼자서도 잘해요?’, 하거나 말거나

범여권 단일후보를 자처하는 문국현

범여권 경선이 진흙탕 개싸움이 되면서 문국현이 어부지리를 얻는 듯하다. 그의 지지율은 조금 올라 4~5퍼센트를 넘겼다. 그러나 범여권의 추잡한 경선과 지리멸렬에 비한다면 문국현의 바람은 미풍이고 지지율 상승도 소폭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문국현이 범여권과 후보단일화를 모색하는, 범여권의 일부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국현의 근본적 한계다. 그는 “이미 나를 중심으로 단일화됐다”며 호기를 부리긴 하지만 범여권 ‘도토리’들의 지지표조차 제대로 이동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그와 진보대연합을 해야 한다거나, 그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문국현이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비정규직의 아픔에 공감하며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진보·개혁적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기대와 그의 실제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문국현은 친환경적 이미지를 내세우지만, 그린피스는 유한킴벌리의 모기업이자 문국현이 동북아 경영을 담당하기도 했던 킴벌리 클라크를 미국의 원시림을 마구 벌

이것이 ‘문국현 바람’이 불지 않는 이유

채하는 대표적 반환경 기업으로 지목했다. 문국현은 이런 기업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라고 칭송한다.

또, 문국현은 이명박의 경부운하 사업 공약을 “대재앙”이라고 비난하지만, 광주전남지역 환경·시민 단체들이 사실상 “호남운하”라고 비판하는 ‘신영산강 프로젝트’를 “친환경적”이라며 지지한다.

“기업가의 시대정신”

문국현의 비정규직 정책도 기대와 다른 방향이 될 가능성이 많다. 문국현 캠프는 분리직군제와 비슷한 직무군 중심의 임금체계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방식으로 인정”한다. 이리되면 ‘중규직’·‘무기한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문국현은 비정규직·일자리 문제의 해법으로 유한킴벌리 모델을 제시한다. 물론 유한킴벌리 모델은 생산과정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혁신의 주체라는 점, 그러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경영에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잘 짚어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문국현이 이 모델을 제시하는 이유는 “노동상품이 지식상품으로 고부가가치화되며 … 경쟁력이 올라가고 시장점유율이 증가[해]기 때문이다. 즉, 자본의 경쟁력 향상 전략이다. 이 때문에 현실에서는 모순을 빚는다.

문국현은 이 모델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과로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시간이 준다 해도 단위 시간당 노동강도가 세지면 과로를 줄일 수 없다. 더구나 유한킴벌리 모델은 임금체계를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최근 문국현이 유한킴벌리 모델의 성

공 사례로 꼽는 한국타이어에서 10여 명의 노동자들이 돌연사한 것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꼽혔다. 여기에 “무재해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때문에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한킴벌리 모델이 오히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보완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예컨대, 포스코가 이 모델을 적용하는 과정은 광범한 구조조정과 외주화 과정이기도 했다. 포스코는 최근 3년 동안 거의 2천여 명에 이르는 인력을 감축했다.

결국, 민주노동당 권영길 선본의 지적대로 “문국현 전 사장의 시대정신은 기업가의 시대정신일 뿐”이다.

문국현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신자유주의의 기관차 구실을 하는 다보스포럼을 칭송한다. 그가 곧 만들 신당에는 “대기업을 하신 분들이 10여 분 정도 참여”해 “국가 경쟁력 향상”을 논할 것이라고도 한다.

또, 국가보안법 개폐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정직한 공격보다는 전략적인 공격을 해야”한다며 “북미수교라는 빅뱅으로 국가보안법 등과 같은 문제는 통 크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직답을 회피했다. 그는 한국군 해외 파병도 “전투병만 아니라면” 괜찮다고 본다. 문국현을 진보적 후보로 보는 것은 착각이다.

한규한

‘평화’보다 ‘번영’에 주안점을 둔 선언

김하영

남북한이 손을 맞잡고 화해를 다짐하는 것이 대결과 적대보다 훨씬 좋은 일임은 말할 나위 없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여러 해 동안 쌓였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정착을 앞당겨야 한다는 기대를 모았다.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한결에 밀어왔던 군비통제 문제를 이번에는 다뤄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남북 정상이 7년 만에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적 효과는 적지 않았다. 정상회담 말고 또 무엇이 만신창이가 됐던 임기 말 노무현의 지지율을 비록 반짝 일시라도 50퍼센트 대로 끌어올렸는가.

하지만 이에 비해 두 정상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선언’)은 평화 정착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10.4선언’은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길고 상세한 내용(5항)을 담은 반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비통제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자유왕래 부분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군축

군사적 적대 종식 문제는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만 구체적 계획이 제시됐다(3항). 예컨대 국방장관 회담은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다루기로 했고, ‘서해 평화수역’도 경제협력과 연동시켰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대해서는 ‘평화와 경협’의 선순환’이라며 칭찬들이 대단하지만, 사실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에 적용된 정경분리 원리(군사적 긴장이 있더라도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긴장 해소에 기여한다)와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은 군사문제인 NLL 문제를 일단 회피하고 경협 먼저 추진함으로써 평화를 정착하자는 시도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비롯한 수년 간의 남북경협은 “군사문제 해결 없이 경제협력의 확대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는 교훈을 줬을 뿐이다.

3항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분쟁문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 그리고 “불가침 의무 준수” 등 의미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남북기본합의서(1991년)’의 제2장 9조와 10조에 이미 명시됐던 것들이다. 합

의보다 이행의 중요성을 옹변해 주고 있다. 특히, 남한 정부가 평화를 말하면서도 수십 년 동안 육중하게 불러놓은 군사력을 축소할 뜻을 언뜻이라도 비치지 않았다는 점은 군사적 긴장완화 의지를 의심케 한다. ‘10.4선언’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언급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도 말이다.

남한의 국방예산은 1990년대와 2000년대 내내 엄청나게 증가했다. 올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은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이 군사비를 지출하는 나라다.

노무현은 이 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진수식에서 “정말 이 좋은 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며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하고만 아웅다웅하고 있을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주한미군 역할변경론의 유사품처럼 보이는 한국 군사력의 역할변경론(북한에 적대적이지 않은 군사력이라는)을 내세우며 군비 증강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군사력과 군비 경쟁이 지속되는

한 종전선언이 이뤄지더라도 실질적인 평화체제로 나아가기는 어렵다. <프레시안>이 주최한 연속기획강연에서 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담보할 ‘실질적인 조치’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포괄적 신뢰구축 조치와 군비감축”을 강조한 바 있다. “베트남의 예에서 보듯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평화 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데서 더 결정적인 것은 북미관계다. 미국은 북한의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가 선행돼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핵무기까지 폐기하고 검증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마치려면 여러 해가 걸릴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 요인은 남북관계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사 “연내 종전선언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주한 미 대사 버시바우의 말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의 희망대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종전협상 개시

가 선언된다 해도, 그것은 평화체제로 가는 길고 불투명한 과정의 출발일 뿐이다.

‘10.4선언’은 중요한 문제인 자유왕래도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다. 이산가족 상봉은 당사자들이 고향인 집에 비춰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남북자는 이번에도 존재하지 않는 듯한 취급을 받았다.

번영을 위한 평화

일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이상철 위원장은 “상봉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이산 1세대 40만~50만 명 중 상봉 신청 인원이 10만여 명인데 기존 방식(1년에 2~3차례 2백명 씩)을 확대한다 해도 모두 상봉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1970년대 동서독보다 훨씬 못한 수준이다. 상호 교환방문이나 결혼, 여행의 자유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이산가족 생사 확인조차 허락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보통 사람들의 염원이 남북관계에서 얼마나 뒷전인

냉전 우익의 정상회담 혈돋기

‘10.4선언’에 대한 냉전 우익들의 혈돋기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그들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가 NLL을 무력화시킨다고, ‘통일 지향으로 법률·제도도 정비’한다는 조항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호들갑을 떠다.

‘10.4선언’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우회로를 택했는데도 말이다. 심지어 국방장관 김장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NLL을 지킨 것이 성과”라고 했을 정도였다. “북한 합정이 NLL을 침범해 공동어로수역에 들어

오면 기존 교전 규칙대로 대응하겠다.”

이명박의 한나라당은 “핵 폐기 없는 종전선언은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한 비판은 “핵 가진 자와는 악수를 할 수 없다”던 김영삼의 말로를 보여 주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 김영삼의 호전적 태도는 1994년 한반도가 전쟁 일촉즉발로 가는 길을 닦았고, 그해 말 북미가 타협의 길로 들어섰을 때 그는 국제적 왕따가 됐다.

당방 약속을 아예 부도내겠다는 것이냐는 우익의 주장에 이르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

‘10.4선언’ 가운데 가장 길고 상세한 내용을 담은 항목은 5항으로 경제협력사업들에 대한 것이다. 북한 자원에 대한 개발권, 대북 투자 시 우대조건과 특허 부여, 개성공단 2단계 개발, 3통(통행·통신·통관) 등 제도적 보장조치 완비 등 5항에서 언급된 것들은 대체로 남측 기업주들이 원했던 것이다.

이는 <민족21> 편집주간 정창현 교수의 지적대로 “우리가 제안한 걸 북이 사실상 전격 수용”한 셈이다. 남측 기업주들의 입장에서는 보파리에 다 담기 어려울 만큼 성과가 컸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우파 일각에서는 이번에 합의된 경제협력 계획만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며 “퍼주기” 공세를 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비용을 1백12억 달러(10조 2천6백억 원)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것은 북한에 퍼주는 것이 아니라 남한 자본의 북한 진출을 위해 남한 정부가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일반적 자원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창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공리공영”). 이번 선언에 명시된 또 하나의 원칙인 “유무상통”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한다는 뜻으로,

남한의 자본·설비와 북한의 자원·노동력을 서로 맞바꾸자는 의미일 것이다.

북한 철도와 도로의 개·보수도 남한 수출 물자를 대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투자의 일환이다. 현대(아산)이 제작한 자료(<개성공업지구의 투자환경>)에 따르면, TCR 철도(중국횡단철도)나 TSR철도(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해상 운송수단을 이용할 때보다 거리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그림〉참고). 남한 자본의 입장에서 북한은 병전 기간 내내 섬처럼 고립돼 있던 남한을 대북으로 연결해 주는 꿈의 다리인 셈이다.

사실, 이 점에서 보수 우파도 남북경협을 반긴다. 그들은 “북한이 먼저 ‘투자안전국’이 돼야 한다”(〈조선일보〉)고 훈수할 따름이다. “기업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대신 북한에 투자할 수 있(으)려면 북한이 법·제도·인식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수 없다. 김정일 당부를 발매처럼 반대하고 나선 것이 누구였던가.

<조선일보>는 아예 ‘10.4선언’의 이행 여부를 새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고 훈수 둔다. “차기 대통령은 10. 4 남북공동선언을 다시 검토해서 국가(國基)를 흔들 수 있거나 국민에 감당 못할 부담을 지을 수 있는 사안을 가려내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0.4선언’에 대한 지지/반대 구도로 이번 대선을 치러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한나라당 내부에서 나올 정도로 냉전 대결주의는 인기가 없다. 이명박이 냉전 대결주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은 산토끼를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진보진영의 과제는 정상회담공동선언 실천 촉구인가?

진보진영 내 NL계열은 “‘정상회담공동선언’을 적극 지지 옹호하는 실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의 모순을 들춰내고, “남북관계를 통일이 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간다”는 조항을 이용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펼치는 것 같은 일은 좋은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10.4선언’ 지지에 몇 가지 단서를 달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소위 ‘평화 조항’들은 지지하더라도 경제협력의 경우에는, 적극적 반대를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지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남북 경제협력은 자본주의적 경제협력으로, 남한 자본이 북한의 노동력(그리고 자원)을 착취하는 것을 북한 당국이 협력한다는 의미다. 자본은 “단지 물(物)이 아니라 사회관계”라는 <자본론>의 강조를 곱씹을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체제(국가자본주의)가 남한의 경제체제(시장자본주의)보다 더 우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남한 자본이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진출하는 것을 지지할 수는 없다.

둘째, 진보진영은 ‘10.4선언’이 담지 않았으나 중요한 요구를 독립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군축과 그를 통한 복지 확충 요구가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운동’도 ‘10.4선언’과는 다른 입장으로, 진보진영의 독립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진보연대가 ‘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10.4공동선언 실천”의 일환으로 여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아무리 좋게 해석하더라도 ‘10.4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담고 있지 않고, 북한도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전제로 주둔 용인 의사를 밝혀 왔다.

독립

셋째, 이처럼 ‘10.4선언’을 지나치게 확대 또는 희망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환상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10.4선언’이 “NLL 문제 등 군사적 장벽을 제거하기로 했다”거나 “어떤 형태의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함으로써 공격적인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박경순, 2007남북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는 것 등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10.4선언’은 NLL문제를 우회로로 피하고 있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도 불가침을 명시했지만 미국은 잠시 중단했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급세 재개한 바 있다. 넷째, ‘10.4선언’을 지지한다 해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지지로 나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

물론 NL계열 활동가들이 지금껏 그랬듯이 남북 공동 선언은 지지하되 한미FTA와 비정규직 문제 등은 반대하는 식으로 사안별로 구체적인 대응을 해 나아갈 수 있다. 문제는 NL 사상 이론에서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의 비중과 중요성이 가장 크므로(흔



진보진영은 ‘10.4선언’에 담기지 않았으나 군축처럼 중요한 요구를 독립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히 통일이 되면 모든 문제들이 얹힌 실타래처럼 풀릴 것이라는 식으로까지 주장된다). 반신자유주의 운동과 노동계급 투쟁이 남북 화해 협력이 헌신하는 듯한 정부를 불안정에 몰아넣을 수준으로까지 고양된다면, 지금까지 그랬듯이 NL 사상 이론을 모순에 빠뜨리고 NL계열 지도자들을 분열, 비일관성, 어중간함, 동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기 등으로 내몰 수 있다.

이미 모순이 느껴진다. 한국진보운동원 구소 박경순 소장은 “남측 정부당국은 그것을 철저히 이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비판하지만, 도장 찍고 온 사람을 제치고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다’고 시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NL 정치 사상에서 강조하는 “우리민족끼리 정신”과도 모순돼 보인다. 심지어, 남한 정부가 회피할 수 있는 북한 당국의 희망 사항들을 나서서 관철하겠다는 함축처럼 들리기도 한다.

‘10.4선언’에 대한 NL계열의 입장에 맞춰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가칭)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제안했다. “정부, 국회, 경제계, 시민사회 진영을 포함 초당적, 초정파적으로 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것은 일종의 통일 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은 민족의 과제이므로 계급을 초월한 연합이 자연스러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기구가 ‘10.4선언’에 대한 해석조차 통일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비교적 명백한 구절을 둘러싸고도 상이한 해석이 분분하고, 심지어 NLL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부 안에서 국방장관과 통일부장관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도 천차만별일 것이다.

남북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국주의에 대한 입장에서도 기구(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할 것이 뻔하다. 북미 갈등이 불거진다면 미국에 친화적 입장에서 북한에 친화적 입장까지 다양한 것이다. 평화협정의 성격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을 유지하느냐 철수하느냐를 놓고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것이다.

김하영



〈그림〉 남한 자본이 북한 철도 개보수를 원하는 이유 – 개성부터 함부르크까지 뱃길로 1만 9천 킬로미터, 철도는 9천 킬로미터(소요시간은 3분의1)

베네수엘라의 미래

베네수엘라에서는 우고 차베스의 개헌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마이크 곤살레스가 개헌 논쟁이 민주주의를 심화시킬지 아니면 권력을 더욱 집중시킬지 살펴본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노동계급 거주 지역인 라 칸텔라리아의 토요일 오후. 거대한 천막으로 하늘을 가린(지금은 우기雨期이다) 광장에 2백 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열두 그룹으로 나뉘어 여기저기 둥근 테이블에 앉아있다. 모두 볼리바르 식 혁명을 상징하는 붉은 티셔츠를 입은 그들은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을 논의하고 있다. 1백20여 개의 조항을 고친 개헌안은 오는 12월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떠드는 소리 때문에 귀가 멍멍할 지경인데, 이것은 베네수엘라에서 흔한 광경이다. 그러나 정치 토론과 논쟁에 대중이 실제로 참여하는 모습에는 뭔가 고무적인 것이 있다. 차베스가 말한 “21세기 사회주의”나 “민중권력”이 바로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 베네수엘라 어디를 가든 차베스의 초상화와 함께 “21세기 사회주의”나 “민중권력” 같은 구호와 표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핵심 사상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혼란이 있다. 그리고 대중운동이나 노동조합, 사회단체에서 볼리바르 식 혁명에 가장 헌신하는 사람들의 경험은 흔히 그런 혼란을 가중시킨다.

예를 들어 보자. 라 칸텔라리아의 모임 같은 행사가 주말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되풀이된다. 그런 모임들은 대부분 최근 설립된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이하 PSUV)의 지역 지부 집회들이다. 6개월 전에 차베스는 PSUV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했고, 오는 12월 PSUV의 첫 당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문제는 당의 구조나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차베스가 지명한 소수의 전국위원들이 당의 강령이나 목표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의 성격과 형태를 결정하는 과제를 맡아 수행해왔다. 당의 공식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들 전국위원들이 사실상 지도부 구실을 해왔고, 매주 토요일마다 모임의 토론 주제를 정한 것도 바로 이들이었다.

반발도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의제를 제기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역에서는 오직 전국위원 한 명이 사람들의 견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가 커다란 반발에 부딪혀 철회되기도 했다. 그러나 개헌안들이 한 묶음으로 투표에 부쳐질 것이고, 따라서 세 부 사항에 대한 논쟁은 대체로 형식적이라는 것이 여전히 사실이다.

결국, 볼리바르 식 과정의 다음 단계인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을 공개적으로 논쟁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던 개헌안 국민투표는 사실상 또 다른 차베스 신임 투표가 되게 생겼다. 개헌안 내용을 선전하고 설명하는 광고에서는 개헌 조항들을 모두 차베스 개인이 작성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

다. 우파 야당들은 늘 그랬듯이 차베스의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조항에 집중하고 있다. 이것은 대다수 사람들로 하여금 이번 개헌안 찬반 투표도 차베스 인기 투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다.

PSUV 안에서도 똑같은 주장, 즉 이번 투표는 충성도 테스트라는 주장 때문에 사실상 특정 조항에 대한 찬반 논쟁을 하기가 매우 힘든 분위기가 형성됐다. 당은 국가와 비슷한 것이 돼버렸고, 그래서 [개헌안에 대한] 의심을 표명했다가는 혁명을 의심하거나 심지어 적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PSUV 당원 수는 약 6백만 명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애초의 의도는 그런 대중 조직이 아니었다.

원래 구상은 아마 멕시코의 제도혁명당(PRI) 비슷한 정치 기구를 만들어서, 모든 수준에서 국가 관리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고 승진이나 진급을 위한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것이었던 듯하다. 그러나 곧잘 그랬듯이 차베스는 자신이 출연하는 일요일 TV 프로그램에서 모든 사람에게 당 가입을 권유한다고 갑자기 선언했다. 이것은 당의 성격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그 전까지 차베스가 구축하지 못했던 대중운동과의 조직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방적 관계일 뿐이라는 사실이 지난 몇 주 동안 드러났다.

베네수엘라 좌파는 향후 과제를 둘러싸고 올해 초에 논쟁을 벌였다. 노동조합들의 중앙 연맹체인 전국노동자연합(이하 UNT)과 몇몇 다른 조직들은 내부적으로 견해가 갈렸다. 예컨대, UNT의 매우 존경

받는 지도자인 오를란도 치리노는 PSUV에 들어가지 않았다. UNT 지도부의 다른 사람들은 PSUV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좌파 조직들 내부에서도 똑같은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많은 대중이 PSUV에 가입한 것을 고려해서, 대다수는 새로운 당 안에서 비판적 경향을 건설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당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바퀴 안의 바퀴

[민중] 권력에 대한 기층의 발전하는 기대와 통제력의 [중앙] 집중 심화라는 현실 사이의 이런 긴장이 점차 베네수엘라의 정치 생활을 좌우하고 있다.

이런 모순 심화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지난 8월 중순 조합원 약 1백50만 명을 거느린 공공부문 노조 펜트라세프의 대표자들이 단체협상을 위해 노동부를 방문했다. 노동부장관 라몬 리베로는 ‘볼리바르 식 노동조합연맹’의 회원이자 한때 트로츠키주의자였던 사람이다. 그러나 리베로는 펜트라세프의 대표자들을 만나기를 거부하고 그들을 노동부 건물의 방에 가둬버렸다. 그들에게 음식도 주지 않았고, 가족들은 창문 너머로 대표자들을 만나야 했다. 대표자들은 옛 새 뒤 용역 깡패에게 쫓겨났다.

이 사건은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나는 노조 집행부와 노조 변호사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변호사는 노동부장관이 노동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읽어 주었다. 그 서류에서 노동부장관은 “소위 노조 대표라는 자들”이 조합원 “대표권을 자칭”했다고 거듭거듭 주장했다.

노조 대표자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우고 차베스가 끝내 침묵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표면 아래서 전개되고 있는 더 심층적인 과정을 보여 준다. ‘4월 13일 운동’의 존경받는 정세 분석가이자 고참 활동가인 폴란드 데니스는 많은 개헌안 조항들과 PSUV 건설은 차베스 자신이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하는지를 잘 보여 주는 예들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에서 볼리바르 식 혁명에 대한 주된 위협 세력은 우파가 아니다. 우파가 여전히 언론을 지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정치적으로 분열한 채 지리멸렬해 있다. 반면에 차베스 주위의 관료들과 정부 관리들은 잘 조직돼 있다. 1998년에 처음 집권했을 때 차베스는 자기 주위에 제5공화국 운동(MVR) 지지자들을 불러모았다.

그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과거 부패한 정권의 특권을 누리다가 얼마 전 차베스 편에 붙은 기회주의자들이었다. 그 사람들 중 일부는 2002년 반(反)차베스 쿠데타를 지지하는 등 믿지 못할 친구들이 입증됐다. 다른 사람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전히 정부에 남아 있지만 과거의 관행, 특히 부패 관행을 지속했다. 그들은 많은 중소 도시 시장들뿐 아니라 강력한 주(州)지사들과도 결탁했고, 민간 자본가들과 관계를 확립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람들은 차비스타(차베스 지지자들) 우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차베스를 끌어내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차베스는 과거에도 그랬

통합사회주의당(PSUV) 포스터 - 베네수엘라 혁명은 차베스 개인을 뛰어넘는 진정한 민중권력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

고 지금도 여전히 정부 지지자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유일한 핵심 요인이다. 그러나 차비스타 우파는 볼리바르 식 혁명의 발목을 붙잡고 차베스의 힘을 억제하는 다양한 수단들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지역과 기층의 많은 훌륭한 활동가들이 분명히 불만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차비스타 우파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노동부장관과 그를 지원하는 노조 관료들은 차비스타 우파의 일부라고 봐야 한다. 노동부장관이 펜트라세프 대표자들을 대한 태도나 사니타리오스 마라카이(거의 1년 동안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한 채 국유화를 요구해 온) 공장과 시우다드 구야나의 시도르 철강공장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가 무엇에 헌신하는지 분명히 보여 준다.

차비스타 우파

두번째 영향력[위협 요인]은 차베스 자신, 그리고 그를 거둬들여 지지한 베네수엘라 국민 다수와 차베스의 직접적이고 복잡한 관계다. 지역사회와 기층 수준에서는, 진지한 혁명적 헌신성이 부족하고 부패에 찌든 많은 지방 관료들이 가장 훌륭한 활동가들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기 일쑤다. 최근 많은 지방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들은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바로 그 활동가들이 차베스는 현장 상황을 잘 모른다고 주장한다. 가장 복잡한 지방 문제들도 차베스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런 배경에서, 개헌(또는 적어도 개헌안의 일부 조항들)은 차베스가 정부 정치평론가들이 “기성 권력”이라고 부르는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처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정치 개혁 내용에는 대통령 임기 연장과 연임 제한 철폐가 들어 있다. 많은 조항들은 최종 결정권을 대통령에게 맡기고 있다. 예컨대, 행정 기구를 구성하고

재편하는 권한, 십중팔구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게 될 공공부문에 대한 경제적 의사결정 권한 등이 그렇다. 개헌안에 제시된 새로운 정치 구조는 흔히 모순적이다. 그것은 경제 부문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최근 정부 산하 위원회가 경찰은 지방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음에도 국가 안보는 점차 군대에게 맡겨질 것이다.

이것은 2주 전 차베스가 군인 진급은 대통령 권한일 것이고 (비록 말썽 많고 부패로 얼룩졌지만) 그나마 있던 기존 진급 절차들은 단계적으로 폐기될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연관돼 있다.

게다가 PSUV는 분명히 내부 논쟁이 거의 불가능한 대통령의 권력 도구가 되고 있고, 개헌안 조항들은 낱낱이 아니라 한 묶음으로 찬반 투표에 부쳐질 것이다. 훌륭한 조항들, 예컨대 노동시간 단축 조항이나 임시직과 위험 직종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기금 조성 같은 조항들이 통과되려면 다른 모든 조항들과 함께 통과되어야 한다.

물론 개헌안은 여기저기서 “민중권력”이 헌법의 기초이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고 거듭거듭 확인한다. 민중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는 사회화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간·공공·‘사회적’ 부문 중에서 사회적 부문은 경제 전체의 극히 일부(아마 5퍼센트)에 불과하고 협동조합을 포함한 다양한 소유 형태로 나뉘어 있다. 협동조합의 동역학은 집단적 소유보다는 소기업에 더 부합한다. 자치평의회는 각종 미션[사회복지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지역 수준에서 책임을 부여받을 것이다. 그러나 자치평의회의 전략적 방향은 중앙 정부나 지방·주 정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자치평의회

그런 것이 민중권력이라면, 민중권력 개념은 다수에 의한 권력과 정부의 분권화를 뜻하는 것인가? 베네수엘라 헌법에는 분명히 기층에서 나오는 진정한 민주적 참여를 위한 메커니즘, 즉 대표자들의 제한 의회가 존재한다. 그것은 1999년 볼리바르 식 헌법에 합의한 제한의회와 비슷한 것이다. 그런 기구는 아래로부터의 21세

기 사회주의를 향한 실질적 진전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개헌을 둘러싼 공개적 논쟁을 이끌 수 있고, 그리 되면 대중 조직들은 자신들이 단지 대통령 — 사실상 혁명의 유일한 주체인 — 지지 부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물론 민중권력 논쟁에는 또 다른 참고 사항이 있다. 쿠바 식 민중권력은 위계적이고 중앙집권적이다. 국가가 지도부를 임명하고 대표들을 지명한다. 국회는 1년에 두 차례 며칠 동안 회의를 열고 국가가 제안한 사항들을 (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 쿠바 식 민중권력에서 지방 권력 기구들은 국회의 결정들을 집행하고 가장 효과적인 집행 방법을 토론하는 구실만 하도록 돼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쿠바의 영향력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데니스가 “민중의회의 민주주의”라고 부른 것이 단지 또 다른 차베스 신임 투표 — 아무도 이견을 제기할 수 없는 — 로 전략했다는 사실은 민중권력의 한계를 보여 준다.

베네수엘라의 최근 역사는 근본적 교훈 하나를 가르쳐 준다. 1998년 차베스의 당선으로 시작된 볼리바르 식 혁명은 2002년에 혁명적 과정이 됐다. 당시 베네수엘라 민중은 역사의 주체가 돼서 반차베스 쿠데타를 패배시켰다. 2002년 4월 대중운동은 단지 민중항쟁의 주역(1989년 저항 운동의 물결에서 그랬듯이)으로서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단적 행동으로 볼리바르 식 혁명의 미래를 좌우할 준비가 돼 있는 잠재적 혁명가들로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 2007년에도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 진정한 민중권력 — 를 건설하려는 투쟁은 지속되고 있다.

마이크 곤살레스는

《체 게바라와 쿠바 혁명》(책갈피)의 저자이고, 스코틀랜드의 신생 사회주의 정당 ‘솔리대리티’(Solidarity)의 당원이고, 글래스고대학교 스페인어문학부 부교수이다.

서평

《성적 다양성, 두렵거나 혹은 모르거나》, 이후

성적 다양성 옹호를 위한 좋은 길잡이



이 책에는 동성애의 역사는 물론이고 세계의 성소수자 운동, 동성애에 대한 종교의 시각, 과학적 견해 등 성적 다양성을 옹호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다.

저자는 동성애자 운동의 역사를 상세히 언급하며 동성애자들이 투쟁을 통해 권리를 쟁취해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69년 미국의 ‘스톤 월 항쟁’보다 한 세기 앞선 19세기부터 이러한 저항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저자는 동성애자 운동의 선구자적인 독일의 칼 울리히스가 반동성애 법령에 맞서 싸우다 투옥됐고,

오스카 와일드가 법정에서 동성애를 변호했던 일 등의 흥미로운 역사를 소개한다.

또, 혹독한 탄압 속에서 맥을 이어 온 동성애자 운동을 옹호하며 “동성애자 해방은 … 보통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비범죄화와 자유를 요구할 때 가능하다”고 힘주어 주장한다.

이 책에는 운동 안의 논쟁도 소개돼 있다. 동성애자 해방 운동 안에서 성차별 의식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거나, 여성운동 내에서 레즈비언들을 불명예스럽게 여기면서 불거진 논쟁들은 지금도 운동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저자는 자본주의가 동성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급진적 시각을 제공한다. 시드니의 마디

그라 같은 세계적인 동성애자 축제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다. 그러나 저자는 시장이 정치적 권리를 가져다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자본주의는 자신들이 물건을 팔 때를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이 세계에는 차별적인 법과 관습이 존재하고 있고, 동성애자 대다수는 가난하게 살고 있다. 다수에게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동서양을 아우르는 동성애에 관한 다양하고 풍부한 역사적·문화적 해설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깨 버리는 데 있다. 한 예로 711년에 무슬림들은 스페인을 침략해 동성애를 억압하는 기독교 법률을

없앴다. 현대 일부 이슬람국가에서 동성애자를 처형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깜짝 놀랄 일이다.

숨겨진 역사

–르네상스 시기의 유럽에서 동성애적 관계는 매우 흔한 일이었다. 중국의 남성 동성애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 자식을 낳는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용인됐다. 아프리카 전통 속에도 동성애가 존재했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동성애자들에게 자신이 역사 속의 일부라는 안도감과 존재에 대한 지속성을 느끼게 해 준다. 저자는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 어떻게 동성애가 불법화됐는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의 설명 중 사회주의 국가 일반이 동성애자를 억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물론 스탈린주의와 마오주의는 20세기 전반에 걸쳐 아주 해악적인 반동성애주의를 강화했다. 반면 1917년 러시아혁명 직후 볼셰비키는 몇 주 만에 성과 관련된 낡은 법률들을 폐기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했다.

아쉽게도 저자는 러시아혁명이 보여 준 성 해방의 가능성과 스탈린주의 반혁명 이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현대에 행해진 상상을 초월하는 동성애자 생체실험의 역사를 읽다 보면, 대체 왜 과학이 이성애에는 아무 의문도 가지지 않으면서 동성애의 원인을 밝히는 데 그리도 엄청난 공을 들였는지 의문이 절로 들 것이다. 저자는 매우 명쾌하게 주장한다. “성의 기원과 시민적·정치적·인간적 권리는 무관하며, 평등은 과학적 명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이 책은 성적 다양성을 향유할 대안 사회에 대한 논의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곽이경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 데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아군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중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되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첼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뉴코아·이랜드 투쟁 “꼭 승리해서 노동자의 힘을 보여 주세요”



이랜드 파업 1백 일 문화제

지난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는 이랜드 회장 박성수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울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랜드 투쟁에 대한 압도적 지지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장석주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2회전부터 6회전까지 우리가 죽도록 뺏다. 8·9회전에는 우리가 얻어맞았지만 저쪽은 지금까지 못매 맞아 누적된 게 있다. 안 아픈 척하고 있을 뿐이다. 하드 펀치 쏘으면 KO로 이긴다 … [연대] 총파업 때려주면 또 다른 국면이 열린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10월 6일 이랜드 파업 1백일 문화제에도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이 무려 6백여 명이나 참가했다. 노무현 정부가 그동안 무려 6백40명을 연행하고 그 중 16명을 구속했지만 투지는 꺾

이지 않고 있다.

문화제에서 이랜드 면목분회원의 딸 배수연 씨는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꼭 승리해서 법을 바꾼 노동자로 교과서에 실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꼭 승리해서 교과서에 실리고 노동자의 힘을 보여 줬으면” 한다는 편지를 낭독했다.

최근 박성수는 “나도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 하지만 내 뒤에는 경총과 전경련 등이 줄줄이 서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 조직 노동자들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연대가 절실하다. 조직 노동자 연대 확산을 위한 뉴코아·이랜드 노조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최영준

파업을 준비중인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 서울대병원분회 노동자들이 10월 10일(수)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투표 결과 무려 83.2퍼센트가 파업을 찬성했다.

서울대병원 사측은 비정규직 2백39명을 정규직화하기로 한 약속과 팀제·연봉제·성과급제를 도입하지 않고 외주용역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휴직조각으로 만들려 한다.

그동안 비정규직 투쟁에 앞장서 연대해 온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반대와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

하며 파업을 벌이려 한다. 서울대병원분회는 별도 직군을 만들어 ‘반쪽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에도 분명히 반대한다.

또, 2인실 병실료 인하, 다인 병실 확대, 특진제·선택진료제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사측이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앞으로 다른 병원과 공기업 구조조정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공공노조의 힘있는 연대가 필요하다.

최용찬

서울대병원 하청 노동자들의 승리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성원개발분회가 지난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전면 파업을 벌여 임금 12만 원 인상, 장기근속수당 지급 등을 쟁취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성원개발 노동자들의 노조 민주화 투쟁때부터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파업 과정에서 성원개발 사

측의 대체인력 투입 시도도 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들이 적극 막아냈다.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해서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증명한 것이다. 이번 승리는 파업을 예고하는 서울대병원분회 노동자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최용찬

오정숙

대학 맑스주의 포럼 성공회대 버마에 불은 오는가? - 버마 민중항쟁 배경과 전망 연사: 마웅제(버마인 활동가) 일시: 10월 11일(목) 6시 30분 장소: 새천년관 7304호 문의: 011-9875-4790 북부대학 통합포럼 버마에 불은 오는가? - 버마 민중항쟁 배경과 전망 연사: 뚜라(‘버마행동’ 대표) 일시: 10월 11일(목) 6시 30분	장소: 고려대 서관 314A (문과대 건물) 문의: 016-9353-5619 지역 사회포럼 서울 중부 버마 민주화의 어제와 오늘 - 버마인 활동가에게 듣는다 연사: 조모아(버마 민주민족동맹(NLD) 한국지부 집행위원) 일시: 10월 11일(목) 8시 장소: 종로 이화예식장 옆 인호빌딩 702호(종로5가역 2번 출구)	참가비: 2천 원 문의: 019-647-3309 서울 동부 세계 경제는 불황에 빠지는가? 연사: 이정구(경상대 경제학과 강사, ‘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10월 16일(화) 7시 30분 장소: 여성능력개발원 3층 회의실(건대역 6번 출구) 참가비: 2천 원 문의: 019-9731-7299 서울 서부 세계 경제는 불황에 빠지는가? 연사: 이정구(경상대 경제학과 강사, ‘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10월 25일(목) 8시 장소: 신촌 세미나 공간 세움넷 (신촌역 1번 출구) 문의: 017-267-0400 청소년 포럼 이랜드 노동자로부터 듣는 이야기 - 비정규직으로 산다는 것 연사: 이랜드일반노조 조합원, 최영준(‘다함께’ 산업팀 활동가) 일시: 10월 13일(토) 2시 장소: 공간 민들레(홍대입구역 4번 출구) 문의: 010-7626-0319
--	---	---	---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주간 <맞불>을 정가구독하십시오 ☐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http://www.counterfire.or.kr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	--



짧은 투쟁 소식들

4대 보험 징수 통합 반대 투쟁

‘4대 사회보험 적용 징수 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노동자 1천여 명이 10월 6일 ‘4대 사회보험 졸속 통합 저지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4대 보험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는 졸속 법안”을 폭로했다. 현재 개악 법안의 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노무현은 조속한 법안 처리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교육 공공성을 위한 교대생들의 저항

10월 5일 광화문에 교대생 6천여 명이 모여 교사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학급당·교사당 학생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많고, 교사의 수업일수는 OECD 평균보다 30일 이상 많은 등 투자 부족으로 한국의 교육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그런데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수를 2014년까지 OECD 2005년 평균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던 것을 어기고, 아무런 해명 없이 2025년으로 미루는 등 공교육 지원을 줄이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추진하려 했다.

이번 투쟁을 통해 교육부로부터 교원 수급계획 재검토, 교과 전담 교사 확대 등의 약속을 받았다.

강연이 끝난 뒤 한 학생은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생각한다”며 눈물을 흘렸고 “매출 제로 투쟁에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자유토론 시간에도 “연대 확대가 승리의 열쇠다” 등등의 미 있는 질문과 주장이 나왔고, 이를 후 삼양점 매출 제로 투쟁 현장에서 그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민주혜

어떻게 정규직 연대를 이끌어 낼 것인가

지난 59호 ‘코스콤비정규직 지부 투쟁의 갈 길’ 기사에서 오정숙 동지는 “‘코스콤 퇴출 운동’ 전술은 의도치 않게 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가로막을 수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코스콤 퇴출 운동’은 코스콤비정규지부의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증권업계 다수 정규직 노조들이 벌이는 일종의 ‘블랙킹’이다.

‘코스콤 퇴출 운동’의 핵심 내용은 ‘코스콤과의 체크단말기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계약 철회와 ‘코스콤 주주 및 증권사 사장들의 주주권리 행사를 통한 시장 퇴출’ 등을 증권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사용자에게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가로막을 수 있”기는커녕 증권업종 정규직 노조들의 적극적 연대 투쟁의 상징이다.

이런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의 확산이야말로 사용자를 압박하는 가장 효과적 방식이며, 진정으로 코스콤 정규직 노조 집행부와 노동자들을 연대에 나서게 하는 길이다.

김문성

.....

김문성 동지의 지적처럼 ‘코스콤 퇴출 운동’에는 블랙킹이라는 성격이 포함돼 있다. 증권업종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같은 비정규직 연대는 지지·찬양받아 마땅하다.

다만 코스콤에 대한 영업 타격 수준을 넘어 ‘시장 퇴출’을 공개 선언한 것은 전술상 과도했다. ‘비정규직 파업이 회사를 위태롭게 하고 정규직의 고용을 위협한다’는 적들의 악선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압박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연대에 나서게”하기 보다 보수성을 자극할 수 있다.

특히 증권 노동자들의 연대에도 불구하고 같은 코스콤 정규직의 외면이 사측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연대를 끌어내기 위한 신중하고 효과적 전술이 매우 중요하다.

코스콤 비정규직 투사들이 정규직 노조 지도부에게 느끼는 배신감을 심본 공감하면서도 투쟁 승리를 위해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말하는 것은 필요하다.

전지운

구역질나도 다시 한번?

끔찍한 배신과 개악으로 뒤덮인 지난 노무현 집권 5년 동안, 이회창이 싫어서 노무현에게 투표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손가락을 자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구역질나도 다시 한번’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한겨레21> 679호에 ‘한국의 랠프 네이더는 필요 없다’는 글을 쓴 김기원 교수가 그렇다.

김 교수는 “가장 진보적 후보를 택한 [결과] ... 가장 보수적인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대]”는 뻔한 협박을 하며 “솔로몬의 재판에서 칼로 아이를 잘라서 반씩 가지라는 판결에 진짜 엄마가 양보”했듯이 민주노동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의] 진보파 후보 랠프 네이더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은 그놈이 그놈이라며 선거를 끌고 나가 부시의 당선에 한몫했다. 그 결과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고 ... 서민의 복지는 악화됐다. 이런 게 과연 별거 아닌 차이[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도 바로 그 “이라크 전쟁”과 “서민 복지 악화”를 지지했다. 2006년 중간 선거 승리로 상·하원을 장악한 후에도 마찬가지다.

노동계급이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못하고 대자본가들의 오른팔(공화당)과 왼팔(민주당)에 번갈아 휘둘리는 미국 정치의 절망적 상황은 극복 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일부 장관 자리” 등을 얻어내며 범여권과 단일화 거래를 하는 게 “입지가 확대되는 [길]”이라는 김 교수의 충고는 진보정당을 기성



정태인 씨도 ‘배신’ 정부에서 이탈해 민주노동당으로 왔다

정치의 부속물로 전락시키며 입지 확대를 가로막는 말인 것이다.

친제국주의·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이란성 쌍둥이 중 하나를 찍는 표가 ‘사표’다. 반면 진보정당 성장의 기초를 놓는 표는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사기를 고양하며 지배자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표다.

한나라당과 범여권이 전쟁과 신자유주의라는 칼로 우리를 내려치는 상황에서, 진보진영의 단결된 투쟁과 민주노동당 지지 운동을 건설하는 게 진정한 ‘솔로몬의 지혜’일 것이다.

전지운

학교는 대박, 학생은 쪽박

10년이 넘는 논란 끝에 단국대는 지난 여름 한남동에서 죽전으로 캠퍼스를 이전했다. 학교 당국은 1994년 죽전캠퍼스 부지를 5백40여억 원에 매입했다. 그 뒤 부지 가격은 최소 10배 이상 올라 단국대의 자산은 크게 불었다. 한남캠퍼스를 팔아서 낸 수익만 해도 2천여억 원에 이른다.

이와 대조적으로 학생들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학교 당국은 기숙사 시설로 5백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 하나만 지었다. 학교 주변 7~10평 짜리 원룸 임대 가격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70만 원’으로 급등해

자취를 하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통학버스는 등교버스가 아침 7시에 한 대, 하교버스가 6시30분과 8시40분에 한 대씩만 운행되기 때문에 이를 놓치면 등·하교를 할 방도가 없다.

또, 학생들의 자치공간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학교는 교내 모든 건물을 밤 11시에 폐쇄한다고 일방적으로 공지했다.

학교 당국은 학생식당도 외주화했고, 그 과정에서 10여 년 동안 일해 온 식당 아주머니들을 부당해고했다. 그리고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아주머니들의 본관 앞 1인 시위조

차 세콤 경비원, 심지어 경찰까지 동원해 탄압했다.

아주머니들의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위한 서명운동에 이를 동안에만 2천여 명의 학생들이 동참했고, 아주머니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다함께’와 여러 학생회들은 ‘우리가 주인이다 운동본부’(우주인)를 결성해 부당해고 등 학교 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행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아직 미온적인 총학생회도 함께할 수 있도록 설득하며 모든 학생들의 단결과 동참을 이끌어내는 운동을 건설할 것이다.

이석민

이랜드 파업 지지 활동의 성공

이랜드 파업이 시작된 지 1백일이 지났지만, 학생들의 지지 여론은 식지 않고 있다. 나는 이 여론을 확산시키고자 고려대 내 학생회·자치단위 등에 게 이랜드 파업을 지지하는 행동을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단과대 학생회 5곳과 자치단위 4곳이 흔쾌히 응했다.

그 결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두 번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9월 22일, 면목점 조합원과 함께 진행한 캠페인은 추석 귀향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한 시간도 안 돼서 학생들 51명이 불매운동 선언에 동참했고 4만

7천 원이 모금됐다.

그 뿐이 아니다. 고려대 내에서 뉴코아·이랜드 조합원과 함께한 강연회가 일주일 사이에 세 번이나 열렸고,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다. 특히 사범대·이과대·정경대 학생회가 공동 주최한 강연회에는 50명이 참가했다.

고려대 출교 무효 판결의 의미

“자본에 복종하는 대학에 대한 경종”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편집자] 조명훈 기자가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을 만나 출교생들의 투쟁과 출교 무효 판결의 의미에 대해 들었다. 홍세화 기획위원은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준)’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동안 고려대 출교생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출교 무효 판결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려대 출교생들이 출교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리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인문 정신·비판 정신·저항 정신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이 돈에 대한 자발적 복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에 최소한의 상식인 법이 제어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대학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민수 교수 사건도 그랬고, 이번 출교 사건도 그렇고 최소한의 양식이자 상식인 법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학생, 대학 당국 등 대학인들과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오늘날 한국 대학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곰씹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려대 출교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까닭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옛날에는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신자유주의 흐름과 맞닿아 그냥 ‘돈탑’ 아니면 ‘기업탑’이라고 부를 만하지요, 대학 건물에 삼성관이니 포스코관이니 하는 이름을 붙이고, CEO를 총장으로 불러오고 하는 것이 마치 기업 집단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대 출교 사태는 자본에 굉장히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사회에 대한 비판적 안목이나 인문 정신 같은 것이 설 자리가 없는, 대학 본연의 자세에서 한참 벗어난 [현실을 보여 주는] 대표적 예였죠.

표면적으로는 보건대와 관련한 문제였지만, 실재는 삼성 이견희 박사학위 수여 저지 시위를 했던 학생들에게 껄뽀죄가 적용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들도 고려대 출교 사태를 우리의 대학, 또 한국 사회의 자화상을 돌아보는 계기로 다뤘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월 4일 ‘출교 무효’ 판결 뒤 법원 앞 집회에서 활짝 웃고 있는 출교생들

고려대 당국이 항소를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출교라는 제재는 배제입니다. 차이의 문

제, 생각이 서로 다른 문제 등을 ‘넌 아니야’라는 식으로 배제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앵플레랑스(불관용)의 전형입니다. 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5백일 넘게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출교생들

“고려대 당국은 법원 판결 인정하라”

“출교 무효!”

재판장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법정 은 사람들의 환호로 떠나갈 듯했다. 고려대 출교생들과 이들의 승리를 원원하며 방청석을 가득 메운 학생·노동자들이 한데 어울려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천막 농성 5백35일째인 10월 6일, 고려대 본관 앞 천막에서 만난 출교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에 차 있었다. 강영만 동지는 “재판 이후 출교 사태가 사회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지 다시금 깨닫게 됐다”며 “사회 전체의 여론을 등에 업고 싸운다는 생각으로 지지와 연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동지는 “학교 안에서는 진보적 학생들이 단결해 더 광범한 학생·직원·교수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학교 바깥에서는 ‘시민사회연대’가 출교에 반대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모은 것이 법정 투쟁 승리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출교생들은 2학기가 개강하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를

조직했다. 강의실 출석 투쟁도 하고 개강 연설도 하면서 일주일 만에 1천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출교 무효’ 탄원서를 받았다. 1백여 명의 고려대 환경미화 노동자들과 30여 명의 고려대 교수들도 탄원에 동참했다.

학교 바깥에서는 ‘부당징계·학생자치탄압 반대 학생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가 출교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었다. ‘시민사회연대’에 속한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교수노조·대학노조·학생교육대책위 등 진보적 시민·사회 단체들이 탄원서 수백 장을 조직했다.

그러나 지난 5백여 일이 늘 희망으로 가득했던 것은 아니다. 출교생들은 특히 학교에 아무도 없는 방학 떠나 투쟁의 전망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그럴 때마다 출교생들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힘은 ‘연대’에서 나왔다고 주병준 동지는 말했다.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

이처럼 제 정신이 아니라고 할 만큼, 신자유주의 기업 집단이 돼 버린 대학 당국자들의 행태가 대학에서 전혀 견제받지 않는 구조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대 출교생들은 5백여 일째 본관 앞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출교생들과 그들의 투쟁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고려대 출교생들이 지금까지 싸워 온 것은 의미가 대단히 큼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5백여 일 동안이나 싸워야 할 만큼 대학인들, 특히 학생·교수들의 연대가 미약했던 것은 아쉽습니다. 우리 교육 과정이 기존 체제 질서에 대한 자발적 복종을 내면화시키고 있고, 학교 당국이 이런 흐름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려대 출교생 같은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지금껏 외롭게 싸워 온 고려대 출교생들에게 다시 한번 연대의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회 불의에 맞서 저항하고, 또 한국 사회에 이런 저항의 양분과 토양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했을 거예요. 특히 올해 대학생대회에 모인 전국의 대학생들이 보여 준 연대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천막에 지지 방문 왔던 <시사저널> 노동자들, 명절 때 외롭지 말라고 찾아와 맛있는 음식을 해 준 고려대 환경미화 노동자들, 이랜드 노동자들, 민주노동당 당원들도 잊을 수 없죠.”

사회적 파장이 큰 투쟁들도 출교생들을 격려하는 힘이 됐다. 출교생들은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 덕분에 어려움을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었다고 했다. 천막 안의 시계는 그렇게, 한국 사회의 시계와 맞물려 흘러가고 있었다.

고려대 본관 앞 천막에는 참 어렵게 ‘봄’이 찾아왔지만 이 잠깐의 봄도 못마땅한 고려대 당국은 벌써부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새롭게 투쟁 의지를 다지는 출교생들의 얼굴이 진지해 보였다. 서범진 동지는 이렇게 말했다.

“법원의 판결은 우리가 앞으로 운동을 건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사법부까지 출교의 부당성을 인정한 것은 출교 철회 운동에 대한 지지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야 강의실 문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출교생들이 강의실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학생·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한 때다.

조명훈